No.2018-26 (2018.12.20)

정책브리핑은 www.sejong.org
『정책브리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료 문 의 : 연 구 기 획 본 부

세종정책브리핑
Sejong Policy Briefing

신남방정책과 한 · 인도 특별 전략적 파트너십

최 윤 정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목 차]

[핵심 요약] ····· 1

1. 서론 ····· 2

2. 신남방정책과 인도 ····· 3

가. 신남방정책 개요

나.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

3. 한·인도 파트너십 경과 및 평가 ····· 5

가. 한·인도 파트너십에 대한 한국의 평가

나. 한·인도 파트너십에 대한 인도의 평가

4. 한·인도 특별 전략적 파트너십 구현을 위한 정책 제언 ···· 12

가. 신남방정책 6대 발전 방향

나. 3P+ 원칙에 기반한 협력사업

* 본 정책브리핑에 개진된 의견은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닌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 핵심 요약 ■

○ 인도는 최고속 경제성장을 구가하는 세계 최대의 민주국가로, 글로벌 소비와 생산 기지일 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력과 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한 차세대 강대국

○ 한국은 인도와 FTA를 체결하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Special Strategic Partnership)로 관계를 격상시키는 등 제도적 발전을 이루었으나, 협력 수준은 2011년 이후 답보 상태

○ 이에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인도를 ASEAN과 함께 남방 협력의 거점 국가로 설정하여 외교 및 시장 다변화를 추구하는 신남방정책을 발표하고,

○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2018.7)을 통해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인도의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 간의 접점에 기반,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에 미래(Future)를 추가한 '3P+(플러스)' 원칙을 중심으로 양국 관계 증진에 합의

○ 인도는 신남방정책이 최초로 인도를 한국의 대외정책에서 파트너로 명시하고 4강 수준으로 관계를 격상시킨 것과 협력의 원칙에 환영하며, 이를 통해 진정한 특별 전략적 파트너로 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희망

- 인도는 사람을 우선하는 원칙에 동의하고, 양자 관계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략 등 지역 이슈 공조,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로의 협력 확대 등을 제안

○ 이에 본고는 신남방정책의 원칙과 인도측 제안을 종합하여, 한·인도 특별 전략적 파트너십 구현을 위한 6대 정책 발전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며,

- 【확장성】 양자에 집중하는 단계를 넘어 아시아까지 확장하는 동반자적 비전 수립
- 【장기성】 외교, 경제통상 다변화 구현을 위해 장기적,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
- 【종합성】 사람, 평화, 번영, 미래를 함께 발전시키는 통합적 정책으로 발전
- 【상호성】 인도의 미래비전과 수요를 반영하여 상생번영하는 협력사업 추진
- 【구체성】 협력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사업 발굴
- 【실행력】 양국 협력을 총괄 수행하는 상시 추진기구와 같은 제도적 기재 구축

○ 상기 발전 방향을 염두에 두고 특별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4대(3P+) 원칙별 협력사업을 제시함.

- 【사람(People)】 정부과 민간 차원에서 상호 이해와 교류 확대
  ※ 학술교류 및 1.5트렉 협력 강화, 공감대 확대(역사, 식민지 이후 빠른 경제성장 등)
- 【평화(Peace)】 안보 협력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파트너
  ※ 인도-태평양 전략 공조, 방산협력,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구현 파트너
- 【상생번영(Prosperity)】 제조업 고도화와 통상 파트너십 강화
  ※ 인도의 수요(제조업 육성,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무역적자 해소)와 우리 수요(제조경쟁력 강화, 시장다변화, 수출기업 애로 해소 등)를 결합한 상생형 사업 발굴
- 【미래(Future)】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체제 전환에 공동 대응

주 요 내 용

1. 서론

○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인도와 ASEAN을 남방 협력의 거점 국가로 설정하여 외교 및 시장 다변화를 추구하는 신남방정책(New Southern Policy)을 발표하고, 대상국을 상대로 정책 구현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경주

○ 신남방정책을 통해 인도 및 ASEAN과의 관계를 주변 4강(미중일러) 수준으로 높일 것으로 선언한 바, 실제 인도의 위상 및 중요성에 부합하는 첫 정책으로 의미가 큼.

○ 하지만 인도가 국가의 중요성에 비해 제대로 다루어지고 있는 지 의문이 제기

- 정상의 인도 국빈방문(2018.7) 및 영부인 방문(2018.11)이 이어졌으나, 이후 신남방정책에서 인도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 인도와 협력할 수 있는 정부 및 민간 차원 채널도 미미한 상황

※ 반면 아세안은 연례 정상회의 및 차년도의 특별정상회의 개최 등 정부 차원은 물론이고, 한-아세안센터 등 1.5트렉과 민간 차원의 채널도 상대적으로 활성화

○ 이에 본고는 인도의 전략적 가치를 다시 한 번 평가하여 한국 입장에서 인도를 전략적으로 위치시키는(positioning) 한편,

○ 한국 및 신남방정책에 대해 인도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남방정책이 진정한 양국간 특별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현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자 함.

○ 특히 신남방정책 발표 이후의 한·인도 협력에서도 경제분야(번영)가 압도적이었으며, 그 외 사람, 평화, 미래 원칙에 해당하는 사업은 극히 제한적인 점에 주목하여,

○ 신남방정책이 3P+ 원칙에 입각하여 진정한 한·인도 특별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의 발전방향 및 사업을 제안해보고자 함.

2. 신남방정책과 인도

가. 신남방정책 개요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직후부터 우리나라의 대외협력 구상인 '동북아 플러스책임공동체'의 한 축으로서 신남방정책을 핵심 대외정책으로 추진

※ 우리 정부는 러시아, 몽골 및 중앙아시아 등 북방지역과 ASEAN, 인도를 포함하는 남방지역과의 협력 강화를 새로운 글로벌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이를 위해 각각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추진

- 신남방정책은 지정학적 위치, 인구 및 경제 규모, 성장률, 경제협력 수준, 생산 및 R&D 기지로서의 활용성 측면에서 ASEAN과 인도의 전략적 가치를 재인식하여,

- ASEAN과 인도를 남방지역의 거점으로 삼아 경제·외교를 다변화하여 ASEAN, 인도와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국(미·중·일·러) 수준으로 격상한다는 구상으로,

- 미·중 무역갈등으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역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G2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외교 전략의 의미 있는 전환

❍ 문재인 정부는 ASEAN, 인도와 정상외교를 통해 신남방정책을 홍보하고 대상국과의 교감을 확대하는 한편 신남방정책의 비전을 더욱 구체화

- 2017년 11월 ASEAN 3국(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순방에서 '3P 원칙', 즉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에 입각한 신남방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역내 회원국의 공감과 지지를 얻은데 이어,

- 2018년 베트남, 필리핀, 인도,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신남방정책을 구체화하면서 경제·외교 다변화 및 역내 평화협력을 주도할 기반을 마련

❍ 7월 인도 국빈방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와 신남방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다양한 협력사업을 논의하여, 신남방정책에 기반한 인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공고화에 본격 시동

- 한·인도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나라의 신남방정책과 인도의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 간 접점을 근간으로 '3P 플러스', 즉 사람, 번영, 평화에 더하여 미래(Future) 협력에 기반 한 양국 협력 증진에 협의

- 문재인 대통령은 한·인도 관계에서 '단순한 경제협력을 넘어, 더불어 잘 사는, 사람중심의 평화공동체를 함께 만드는'[1]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의 모멘텀을 창출

- '3P 플러스' 기반의 협력비전을 바탕으로 양국 정상은 ① 양국 정부와 국민의 교류 활성화, ② 상호보완성에 기반한 경제협력 확대, ③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강화, ④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 협력 플랫폼 구축 등에 합의[2)]

나.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

○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구가하는 세계 최대의 민주국가로, 글로벌 소비와 생산의 기지일 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력과 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한 차세대 강대국

○ 【경제규모】 인도는 2018년 이미 세계 7위의 경제대국(GDP 2조 8,482억 달러)[3)]

※ 구매력기준 GDP는 9조 4,560억 달러로 2009년부터 세계 3위를 유지

- 나아가 인도는 2026년 전후 일본을 압도하며 세계 3위 경제대국 부상 전망

※ 2014년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넘어선 이후, 7%대의 고성장세 지속 시현

○ 【인구혜택】 13억 1,600만 명 인구 평균 연령이 28세로 'demographic dividend' 최대 수혜국

※ 인도 인구는 2024년 14억 4,400만 명 도달한 이후 중국을 지속 능가할 전망이고, 2050년까지 생산가능 인구도 64%로 풍부[4)]

※ 인도 인력은 영어·세계화 능력이 뛰어나 글로벌 무대에서의 활약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IT, 엔지니어링, 과학기술 능력의탁월함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음.

○ 【생산기지】 세계의 제조업 허브로 부상

- 대서양→태평양→남중국해(중국·아세안)→인도양(인도·남아시아)으로 제조업 거점이 이동(WTO, 2017)

- 인도는 2020년 5위로 제조업 경쟁력도 상승할 전망

※ 미국의 국가경쟁력위원회와 Deloitte가 3년마다 발표하는 Global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Index의 2016년 자료에 따르면, 인도의 제조업 경쟁력 순위는 2016년 11위에서 2020년 우리나라(6위)를 제치고 5위로 올라설 전망

○ 【체제안정】 시장경제국이자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

- 1991년 경제개혁 및 개방 조치 이후 안정적으로 시장경제체제를 운영

※ 이는 WTO 시장경제국 지위(Market Economy Status)를 획득하지 못하고, 사드보복 등 정치와 경제를 연결하는 중국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인도의 강점

---

1)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 2018년 7월 9일. 청와대 홈페이지.
2) 한·인도 공동언론발표문. 2018년 7월 10일. 청와대 홈페이지.
3) IMF. 2018.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4) UN. 2018. Population Report.

○ 【지역리더】 역내 다양한 지역협의체에 적극 참여하는 제3세계 리더

- Indo-Pacific, RCEP, BIMSTEC 등 중요 지역 경제·안보협의체 핵심 참여국

-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 및 남아시아 등 신흥시장 진출의 유망 거점국

※ 인도는 ASEAN, 한국 등 총 14개국과 FTA를 기체결, 11개국과 체결 협상 등

- 아시아에서 중국 견제가 가능한 유일한 군사·경제 대국

※ 미국 군사력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발표한 '2018년 세계 군사력 순위'에 따르면, 인도(0.1417)는 아시아에서 중국(0.0852) 다음으로 파워지수가 높고, 세계적으로는 미국(0.0818), 러시아(0.0841), 중국에 이어 4위를 차지

○ 【과학기술】 우주항공을 비롯한 기초과학 기술도 세계적 수준

- 2013년 세계 최단 및 최소 개발비용으로 세계 4번째 및 아시아 최초로 화성 탐사선 망갈리안 발사에 성공

- 4차 산업혁명 핵심인 데이터 및 알고리즘 기반 빅데이터, IoT 선두주자

○ 이에 주요국 정부도 다양한 분야와 방법으로 인도와의 협력기반 강화에 박차

< 주요국의 G2G레벨 對인도 협력기반 확충 전략 >

주요국	경제협력 전략 및 진행사항
중국	· 인도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 부상하였으며, 최근에는 국영은행의 풍부한 자금력을 활용하여 인도 인프라개발 시장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
일본	· 경제협력은 물론 외교안보 등을 포괄하는 정상급 협력체제 확립 · 투자진출 여건 개선 등 일본기업의 대인도 투자확대 지원에 우선 집중 · 인프라개발 등을 통한 일본기업 진출지원에 ODA를 적극 활용 · 인도 주정부와 협력을 통한 일본기업 전용공단 적극 개발(JETRO)
싱가포르	· 이중과세방지조약 및 FTA 적극 활용 및 개선 · 장기 투자, 다양한 형태의 투자 등에 국영기업을 전략적으로 활용 · 다양한 민간협력 채널 구축 및 쌍방향 진출지원으로 시너지 극대화

3. 한 · 인도 파트너십 경과 및 평가

가. 한·인도 파트너십에 대한 한국의 평가

(1) 한 · 인도 파트너십 경과

○ 인도는 역사적으로 한국전쟁 당시 인도 의료지원부대 파병, 정전협상에서도 중립국 송환 위원회의 의장국을 맡으며 한국을 지원

○ 1973년 수교 이후 40여 년간 경제, 정치, 문화,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위인사 교류 중심의 현대적 외교관계 시작

※ (공식적) 비동맹 중립정책에 의한 남북한 등거리 외교 정책시행, (실질적) 우리나라와 협력 중요시

❍ 2009년 광의의 FTA인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CEPA)에 서명, 경제협력 기반 마련

❍ 한·인도 협력관계는 2010년과 2015년 두 차례 정상회담 개최 계기 각각 전략적 동반자(Strategic Partnership) 및 특별 전략적 동반자(Special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 점진적으로 발전을 거듭

- 간헐적 고위관료 교차 방문과 합동훈련 수준에 머물던 외교·안보 분야 협력은 인도 정부의 핵심 경제발전 정책인 '메이크인인디아(Make in India)[5]와 결합된 방산협력 논의를 중심으로 확대

❍ 아래와 같이 분야별 고위급 채널을 구축하고 협력을 추진

< 분야별 협력 채널 및 가동 현황>

분야	협력 채널(급)	주요 안건	출범	개최 횟수	최근 개최
재무	재무장관회의(장관)	거시경제, 금융(100억 불 금융패키지)	2006년	5회	2017년
외교	공동위원회(장관)	교역·투자, IT·통신기술, 국방, 인력·문화	2002년	8회	2014년
산업	CEPA 공동위원회(장관)	CEPA 개선, 시장접근성, 교역장벽	2011년	3회	2017년
과학	과학기술공동위원회(장관)	과학기술정책, 공동연구, 인력교류	2005년	4회	2017년
산업	투자촉진협의회(차관)	투자협력 촉진 및 애로 해소	2003년	4회	2013년
외교	외교안보대화(차관)	정치·안보	2005년	4회	2014년
문화	문화공동위원회(국장)	문화·예술, 교육·학술, 체육, 청소년	1978년	7회	2009년

자료: 주인도 한국대사관, KOTRA 국가정보 종합

(2) 한・인도 파트너십 평가

❍ 하지만 한·인도 협력은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실질적으로 답보 상태

❍ CEPA 발효 9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교역 규모는 2011년 2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축소됐다가 2017년 다시 200억 달러를 소폭 넘어서 7년째 제자리 걸음

※ 이미 CEPA 체결 시 교역 목표액을 2015년까지 400억 달러로 설정한바 있으나,

5) '메이크인인디아(Make in India)'는 2014년 9월 인도 정부가 발표한 대표적인 경제발전 정책으로서 인도를 글로벌 제조생산기지로 육성하여 중국식 고성장 달성 및 1억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함.

200억 달러에서 정체

○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인도 상공부 기준 31억 달러로 13위(2000~18년 6월)

※ 한국 기준으로는 48억 달러로 이는 총 해외투자의 1.2%에 불과함. 반면 일본은 동기간 281억 달러(3위)로 한국 대인도 투자의 9배 이상

< 한 · 인도 교역 및 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건)

동향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순위)
교역 동향	수출	11,376	12,782	12,030	11,596	15,056(7)
	수입	6,180	5,275	4,241	4,189	4,949(24)
	총 교역액	17,556	18,057	16,271	15,785	20,005(11)
	무역수지	5,196	7,507	7,789	7,407	10,107
투자 동향	투자금액	347	337	364	340	514
	신고건수	190	160	264	268	308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무역통계 (검색일: 2018년 11월 22일)

○ 2006~15년 한국의 대인도 ODA는 약 1,145만 달러로 상대적으로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2011년까지 연평균 150만 달러 정도 지원되던 것도 이후 급감[6)]

※ 인도가 2005년 G7 이외 국가로부터 ODA를 사양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등 양국 간 ODA 협력은 미미

- 반면 일본은 1986년 부터 인도의 최대공여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 2006~15년 기간 중 대인도 ODA 129억 6천만 달러로 한국 대비 1,000배 이상 공여

※ 일본의 대인도 ODA는 2015년 일본의 대세계 ODA 공여액 중 12.8%(집행액 기준)

○ 그 외 분야별 협력은 2010년과 2015년 두 차례 정상회담 개최 시 공동성명 발표 내용 중에서 후속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선언으로만 그친 경우도 많은 상황

※ 일례로 2017년 3월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방인 당시 양국은 연내 제9차 「한·인도 공동위원회」 개최와 「한·인도 외교·국방 2+2 차관회의」 창설에 합의했으나, 2018년 12월 현재까지 개최하지 못하고 있음.

- 구축한 분야별 협력채널이 정례화 되지 못하여 회의 결과 이행이 저조한 경우도 다수

○ 이와 같이 한·인도 파트너십이 부진한 이유는 상호간 전략적 이해가 미흡하여 정부 대외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높지 않고 국민들의 이해 수준도 낮은

6) OECD DAC (검색일: 2018년 11월 16일)

상황에서 주로 단기 성과를 겨냥한 저임금 대체시장으로 접근하기 때문

- 4강 중심의 한국 외교정책에서 인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설정은 시급성 및 우선순위에서 지속적으로 밀리고,

- 단일민족 일원주의인 한국과 다인종 다원주의 사회인 인도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특히 한국은 인도에 대해 저개발국이라는 고정된 관념이 지배적으로 심리적 거리감이 존재

- 한국은 인도를 빠르게 성장하는 13억 인구대국으로 한국 제품을 판매하거나 저비용 조립생산의 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시장 관점의 접근이 대부분

- 인도가 물리적 인프라를 비롯한 기업환경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낮고 교육, 의료 등 사회서비스가 부족한 이유도 한 몫 하고 있음.[7]

나. 한·인도 파트너십에 대한 인도의 평가

(1) 신남방정책 이전의 한인도 관계

○ 1992년부터 추진한 인도의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에서 한국은 주변국에 머물렀음.

- 1기 동방정책에서 한국은 주변국이었고, 2기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에서도 한국 관계는 중국, 일본과의 관계 다음으로 고려되었음.

- 한국과 CEPA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체결되었으나 실질적 컨텐츠 부족으로 모디 총리가 2014년에 발표한 신동방정책에서도 한국은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함.

- 신동방정책의 최우선 관심사는 미국, 중국, 파키스탄, 일본 등이며, 인도가 아·태지역에서 수행하는 역내 리더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어 있음.

○ 2015년 인도는 한국과의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였으나, 전략적 관계이면서도 공통의 전략이 부재하는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

- 2015년 양국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됨에 따라 양국관계는 정치적으로는 급격하게 발전했음.

- 하지만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라는 이름에 부합하는 전략적 목표와 사업이 부족하고 그나마도 이행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다는 지적

※ 2015년 정상회의 후 양국은 상당한 분량의 성명을 발표하고 여러 건의 MOU를

7) 하지만 World Bank가 발표하는 기업환경 순위인 Doing Business Index에서 2019년 인도의 기업환경은 77위를 기록, 지난 2년간 53계단을 상승하는 등 2014년 모디 총리 집권 이후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음(World Bank, 2018).

체결했지만, 일례로 2015년에 합의한 2+2회의(외교·국방부 장관회의)도 아직 개최되지 않았음.

○ 경제분야 협력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활발한 편이나, 인도에서 CEPA 체결 후에도 무역적자 폭이 더욱 확대되는데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 인도는 CEPA가 양국간의 무역 확대 및 불균형 시정과 더불어 투자, 인력 교류 등 다양한 경제협력 추진에 도움이 되는 협정으로 개선되기를 희망

○ 한국이 인도와 경제관계에 대해 당장의 손익계산 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일례로 LNG 유조선 인도 공급과 한국 기업의 인도 파트너 및 자회사 합작법인과 같은 문제는 보다 장기적 비전이 필요

- 제조업 육성을 위한 Make in India 캠페인에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자·반도체(ESDM: Electronics System Design & Manufacturing), 자동차 및 부품, 조선, 섬유, 식품가공, 방산 등에 투자 확대도 중요

(2) 신남방정책에 대한 인도의 평가 및 발전 과제 제언[8)]

○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인도의 평가는 긍정적이며, 이를 토대로 양국 관계 뿐만 아니라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조까지 포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

○ 한국의 주요한 대외정책인 신남방정책에 인도를 구체적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4강 수준으로 관계를 격상시키기로 한 정책 결정을 높이 평가

- 인도는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통해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받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특히 한국이 아시아의 번영과 평화 정착에 있어 인도가 보유한 경제 및 안보 역량의 가치를 인식하기를 희망

※ 이전의 한국 정부가 발표한 '신아시아 구상' 등에서는 인도를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음.

※ 인도는 아시아에서의 영향력과 민주주의, 중국에 영향 받는 인접국, 북한에 대한 우려, 미국과 전략적 파트너 관계, ASEAN과의 관련성(다이얼로그 파트너, RCEP 협상 등), GDP 7위 규모의 경제대국인 점 등을 들어 인도가 한국의 파트너로서의 가치가 높음을 강조(한·인도전략대화, 2018.11)

○ 신남방정책의 내용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도부 역할도 긍정적으로 평가

- 인도는 신남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문재인 대통령 및 영부인의 인도

8) 신남방정책에 대한 인도측 평가 및 제언은 인도 주요 언론, 주한 인도대사, 전 인도 국가발전위원회(NITI Aayog) 부의장, 인도국방전략연구소, ICWA, 델리대학교, 네루대학교 등의 전문가 면담 및 회의 내용 종합

방문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양국 관계 진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봄.

- 신남방정책의 원칙인 사람, 평화, 번영에 동의하며, 무엇보다 '사람'을 우선해야 한다는 한국의 비전을 공유하고 있음.

- 따라서 동 정책 하에서 양국의 사람들과 문화를 연결하는 것이 특히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 11월 영부인의 아요디야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 참석 및 힌두교 축제인 디왈리 개막식 및 점등행사(Deepotsawa) 참석으로 양국간 사람들을 연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언급하였고,

- 특히 인도는 두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양국간의 신뢰를 쌓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 이러한 맥락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개인적인 친분을 맺기 위해 보여준 노력을 높이 평가

※ 문재인 대통령은 7월 인도 방문 중 한국에서 요가를 가르치는 딸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모디 총리가 선물한 '모디 재킷'에 대한 감사를 다양한 경로로 전달

○ 한국과 인도가 모두 중견국(middle power)으로서 미·중간 경쟁구도에서 국제규범과 질서에 기반한 인도-태평양 건설을 위해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

- 인도는 최근 지역 질서 변화가 미국의 대(對)중국전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아시아의 패권다툼이라는 이해를 갖고 있으며,

※ 인도는 근래 인도–태평양 지역의 두 가지 큰 흐름을 '중국의 성장'과 '미국의 대응'으로 요약

- 인도 역시 최근의 국제 및 지역 정세의 변화가 한국과 인도가 구조적으로 가까워질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데 한국과 인식을 같이 하면서,

- 양국이 처한 환경에서 공통점이 많은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여지가 많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

- 즉, 인도는 신동방정책, 한국은 신남방정책으로 관계발전에 대한 접점을 구축했고, 이는 미·중갈등 사이에서 비슷한 위치에 처한 양국이 안보 우려를 공유하여 새로운 길을 찾아보려는 노력으로 긍정적 평가

○ 다만 정책의 차별화 및 실천력 확보를 통해 인도와 한국 관계를 일본, 중국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라는 입장

-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동남아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1970년대 일본의 후쿠다 독트린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을 지적

※ 1977년 후쿠다 다케오 일본 총리가 마닐라에서 동남아 국가들에 평화국가로 동남아

국가들과 상호신뢰를 구축하면서 동등하게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정책 노선을 표명한 것이 후쿠다 독트린의 시발점이 됨.

○ 특히 인도는 일본과의 관계가 인도의 대외관계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하며, 한국과의 관계가 일본과 같은 관계로 발전할 것을 기대

- 인도와 일본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면서, 고속철 사업, 에너지, 스마트시티, 바이오테크놀로지, 헬스, 제약, 정보통신, 과학기술 등 인도가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의 협력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음.

- 또한 일본은 단일 국가로는 인도에 가장 많은 ODA를 공여하고 있으며, 이는 양자 사회 및 경제협력에서 핵심 인프라 건설 등으로 협력의 핵심

- 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를 'Special and Global Partnership'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공조하기 위해 외교정책을 조율 중

○ 최근 중국과의 관계도 급진전하여 한국에 도전이 될 것으로 경고

- 인-중 교역은 2017년 844억 달러(2016년 712억 달러)에 달해 중국은 인도의 1위 교역대상국임.

- 인도는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지만 투자와 일자리 창출, 인프라 건설에 도움이 되는 한 중국과의 협력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

- 인도는 특히 모디 정부의 중요한 정책 캠페인인 Make in India, Great India(Shreshtha Bharat), Clean India 실현을 위한 인프라 개발 부문에서 중국 투자를 환영하며, 이는 한국의 대인도 투자 및 비즈니스에 점차 도전이 될 것으로 평가

○ 인도는 경제 분야 이외에도 신남방정책을 통해 인도와 한국이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할 것을 희망

- 인도는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지역사회 행위자로서, 지역질서 수립 과정에 참여해줄 것을 희망해온 바(Brewster, 2010), 신남방정책이 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표명

- 특히 파키스탄과 북한간 핵무기를 비롯한 교류 관계로 인해 북한 비핵화는 인도의 안보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설명

4. 한 · 인도 특별 전략적 파트너십 구현을 위한 신남방정책 제언

가. 신남방정책 6대 발전 방향

○ 본고는 신남방정책의 원칙과 한·인도 파트너십의 발전 과제에 대한 인도측 제안 등을 종합하여, 한·인도 특별 전략적 파트너십 구현을 위한 6대 정책 발전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안함.

○ 【확장성】 신남방정책이 정부의 대외협력 구상 중 한 축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인도와 양자에 집중하는 관계를 넘어 아시아까지 확장하는 동반자적 비전이 필요

- 전략적 관계는 양자관계를 넘어서 지역 및 세계문제를 협의하고 논의하는 관계를 지칭함. 북핵 문제, 아시아의 안보체제 문제, 인도-태평양과 같은 글로벌한 문제에서 협력하는 논의를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인도 측에서 발표한 정상 공동선언문에도 명시되어 있음.[9)]

- 인도-일본간의 특별 전략적 파트너십(2014.1)은 특별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십(2014.9)으로 진일보한 바, 한국도 4강 외교를 넘어설 수 있는 파트너로 인도와 함께 새로운 외교공간 창출에 나서야 할 때임.

- 이러한 관점에서 인도의 지역안보 측면에서의 관심사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한국 정부도 긍정적,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전향적 노력이 필요함.

  ※ 지난 11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첨예하게 드러났듯이 아세안은 중·미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으며, 한국도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여 외교적 선택지를 넓힐 필요가 있음.

○ 【장기성】 4강을 넘어서는 외교, 경제통상 다변화를 구현할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장기적 비전과 각오로 추진

-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비용-편익 계산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점에서 양국 공동의 미래비전을 선정하고 선포할 필요

  ※ 예) 2015.12 아베총리 방인 시 일본과 인도의 신시대 개막을 위한 '일·인도 비전 2025' 발표 및 2016.11 모디 총리 방일 시 '일·인도 신시대' 공동 선언 등

- 한국에게 인도는 여전히 '시장'의 관점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나, 미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비전으로 장기적 가치투자를 해야 함.

- 특히 나갈라야를 비롯한 인도 동북부는 인도 입장에서 신동방정책의 성공에

9) 인도 외교부. India and Republic of Korea: A Vision for People, Prosperity, Peace and our Future. 2018.7.

중요한 관문이므로, 한국 기업 진출이 집중되어 있는 뉴델리, 첸나이 이외 동북부까지 인도에서의 협력지를 확대해야 함.

※ 한국이 인도 동북부 지역의 한류를 활용하지 못하고 주춤하는 사이 일본은 이미 Act East Forum을 결성하고 인도와 동 지역 사업을 확대하여 신동방정책의 파트너로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음.

○ 【종합성】 사람, 평화, 번영, 미래를 함께 발전시키는 통합적 정책으로 발전

- 신남방정책에서 번영(경제)은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분명하나, 경제 일변도가 되어선 반쪽짜리 정책에 그칠 공산이 큼.

※ 신남방정책 발표 이후의 한·인도 협력에서도 경제분야(번영)가 압도적이었으며, 그 외 사람, 평화, 미래 원칙에 해당하는 사업은 극히 제한적

- 신남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효과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나,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는 그간의 협력 행태를 답습해서는 안됨.

- 경제 협력도 사람, 평화, 미래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새로운 해법 도출이 가능함.

※ (사람-미래) 모디 총리는 AI가 인도 빈곤 퇴치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판단하여, AI를 활용하여 농부들의 질적 삶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이를 UN SDG 2030 정책과 연계하고 있는 바, 한국 기업과 개발협력기관은 인도 농촌에 단말기 보급 및 소프트웨어 공동 개발, DB 구축 등 추진

※ (평화-번영)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전략을 위한 한·인도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위성항법, 방산 협력 추진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서 인도는 국제사회에서 공조할 수 있는 효과적인 파트너임을 인지하고 이에 걸맞는 노력을 경주해야 함.

※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인도와의 전략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한반도 문제를 전문적으로 설명하고 인도의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상호성】 상생번영하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 입장 뿐만 아니라 인도의 미래비전과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협력사업을 도출해야 함.

- 인도 정부의 국가 비전과 주요 경제·외교정책 조사, 정부관계자 및 오피니언 리더 등과의 지속적 교류 등을 통해 협력 수요 및 역량을 파악

※ 인도 정부의 주요 정책은 Make in India, Digital India, Skill India, Clean India, Foreign Trade Policy 2015-2020, New India by 2022, Act East, Link West 등

- 한국측도 동일한 방식으로 수요 및 역량을 파악하여 상생하는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실행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파트너십 강화에 기여

- 일본은 인도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꾸준히 발전시키는 한편 인도 정부의 당면 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협력 사업에 집중하여 최우방 국가의 이미지 부각

※ 인도는 2022년 독립 75주년을 기념하여 글로벌 강국으로 거듭나는 국가 비전 'New India by 2022'를 선포하고, 이를 위해 2022년 G20 최초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일본은 2022년 고속철 개통 사업을 통해 인도 정부와 국민에게 일본이 인도의 비전을 함께 실현하는 동반자라는 홍보 효과를 극대화

○ 【구체성】 인도-한국 협력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 (사람) 상호 이해와 교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씽크탱크간 교류 및 공동 연구, 양국 민간 및 정부 부처의 전문성 제고, 역사적 공감대 활용, 한국의 경제 발전 및 인력양성 경험과 같은 소프트파워 역량 활용 등

- (평화) 외교·안보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 공조 검토, 사이버 안보, 인텔리전스 공유 메커니즘(테러리즘, 파키스탄-북한), 해상 안보, 방산 협력,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정책 공조 등

- (상생번영) 인도 Make in India 사업 우선 실행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협력, 통상애로 해소 주력, EDCF와 무역금융으로 구성된 100억 달러 금융패키지 신속 집행 등

- (미래)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 협력, 한국의 하드웨어-인도 소프트웨어간 협력, 신재생에너지 공동 개발 등

○ 【실행력】 위와 같은 분야별 활동을 총괄 수행하여 지속적으로 follow-up 할 수 있는 제도적 메커니즘으로서 상시 추진기구 설립이 필요

- 한국은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설립(2018.8)한 바, 인도의 최상위 정책기구인 국가발전위원회(NITI Aayog) 또는 산하 직속 기관 설립을 제안해볼 수 있음.

- 인도-일본 철도 협력(Mumbai Ahmedabad High Speed Rail) 추진을 위해 설립한 일·인도 공동위(Joint Committee Meeting, JCM),[10]의 경우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는바,

- JCM은 양국간 대표적인 철도 인프라 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일본 아베 총리 특별보좌관인 Hiroto Izumi와 인도 국가발전위원회 부의장인 Rajiv Kumar가 공동 대표를 맡아 사업 총괄 기구(Apex body)의 역할을 담당

○ 이에 다음 절에서는 상기 6대 발전 방향에 기반하여 신남방정책의 3P+ 원칙별로 한·인도 특별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협력사업을 제안해보고자 함.

10) 인도 외교부. India-Japan Fact Sheets. 2018. 10.

나. 3P+ 원칙에 기반한 협력사업 제언

(1) 사람(People): 상호 이해와 교류 확대

○ 사람을 기반으로 한 양국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과 인도 양국의 국민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인도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언론, 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대대적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교육과정 개편 및 확대, 교사인 연수 등을 통해 편견을 없애고 거리를 좁히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 인도 현지에 파견된 한국이 언론인은 연합뉴스 1명에 불과한 현실인 바, 언론을 비롯한 주요 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인도에 파견하는 인력을 확충해야 함.

※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문화적 거리감 축소를 위해 지난 정상회담시 체결한 '2018~22 한-인도 문화교류계획서'를 활용하여 인도와의 합작 영화, 드라마 제작 추진도 긍정적으로 검토

○ 특히 한국과 인도는 역사적 교감이라는 긍정적인 요소를 적극 활용해야 함.

- 인도의 허황후나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은 인도 역사연구에도 좋은 사료임.

- 20세기 이후에는 식민경험이 양국간 공감대를 형성한 바, 양국 모두 제국주의 식민지라는 공통의 역사점 암흑기를 지나며, 지배세력에 대한 비협력 혹은 비폭력으로 저항한 동질성을 지니고 있음.

○ 양국간 이해증진을 위해서는 연구기반 확충을 비롯한 학문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어야 함.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대학의 관련 학과 설치도 추진하는 한편,

※ 인도 내에서 한국어 교육은 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한데 반해 한국 내 인도학/힌디어를 교육하는 상급 교육기관은 한국외대, 부산외대, 서울대 정도에 불과함.

- 인도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부처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 및 인력 운영 등에서 국가 차원의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며, 민간 전문가와의 교류 활성화를 보다 적극 추진해야 함.

※ 여전히 양국관계는 관료주의가 작동하므로 1.5 트렉 대화를 지속하여 정치적 추동력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함.

- 한국과 인도가 시민사회간, 대학 및 싱크탱크간 학술교류를 지금보다 더욱 활발하게 진행해야 양국 관계의 근간을 보다 단단하게 확립할 수 있음.

※ 일례로, 양국간 학술교류를 위해 학자간 네트워크 형성 및 교류 기회 확대, 비교연구 장려, 교수/학생 교환프로그램, 복수학위프로그램, 온라인 연구데이터베이스 구축, 산학교류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볼 수 있음.

(2) 평화(Peace): 안보 협력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파트너

① 안보 파트너

❍ 한국과 인도는 중국의 군사력 증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공감적(like-minded) 동반자 관계

※ 美 前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Kurt Campbell도 인도는 미국이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중요한 파트너임을 증언하며, 인도가 일본, 남한과 정치 및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동북아 안보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 바 있음(Campbell, 2011)

- 인도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양국이 아시아 및 글로벌 협력 파트너로 발전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신남방정책의 취지에도 부합

※ 양국은 모두 G-20 회원국이며 ASEAN 내의 ARF와 East Asia Summit, SAARC 등 역내 다양한 협력체에 참여 중임.

❍ 양국의 안보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 인도-태평양 전략 공조, △ 안보 이슈 공조 및 실질적 군사 협력, △ 방산협력의 세 분야 협력을 제안

❍ 먼저, 인도-태평양 전략 공조는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서부터 출발

- 인도-태평양에서 항행의 자유 제한은 한국과 인도 모두에게 타격임.

※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인도양에서의 질서를 유지했음. 중국이 해군 진출로 해양 주권을 주장하면서 항행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대부분이 무역에 타격을 입게 됨.

- 인도는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모든 국가에 인도-태평양이 열려있음을 강조하며('free and open Indo-Pacific') 한국이 긍정적 입장으로 전환할 것을 희망

※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 6월 샹그릴라회의(Shangri La Dialogue)에서 'inclusiveness'를 3-4차례 언급하면서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가 모든 국가에 열려 있음을 강조함.

※ 인도는 전략적으로 동남아, 특히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해양협력을 증진하는 플랫폼을 확대하고 있음.

- 인도-태평양 전략 공조는 미국, 호주, 일본 뿐만 아니라 동남아 국가들로 협력을 확대하는 초석이 될 수도 있고, 향후 중국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음.

- 해상교통로(Sea Lanes of Communication) 보호, 해적활동 금지, 항행의 자유 지지 등 한국의 참여가 용이한 분야부터 시작

- 나아가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결성한 4자간 안보협의체인 Quad(Quadrilateral consultative forum)가 ASEAN의 지역안보포럼인 ARF(ASEAN Regional

Forum)와 같은 다자안보협력체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필요

※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최근 더욱 결집력을 높이고 있는 QUAD도 한국의 안보 위험을 헷지(hedge)한다는 차원에서 융통성있는 활용을 검토할 필요

○ 둘째, 양국 상호 안보 이슈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실질적 군사 협력 실시

- 양국의 직접적 안보 이슈 해결에 기여하기는 어렵지만(중-인 국경분쟁 등), 지역 및 글로벌 안보 이슈 협력이 가능함.

- 일례로, 북한 미사일 기술의 파키스탄 이전에 반대하는 인도는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를 지지하고, 한국은 파키스탄의 테러리즘 및 북한에 대한 핵무기 교류 등에서 인도와 같은 편이 될 수 있음.

- 고위급 방문과 군사정보 교환, 군사훈련 참관, 공동해상훈련, 공동 해적퇴치작전 실시 등 실질적인 군사 협력 확대

○ 셋째, 방산협력은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유망 분야임.

- 인도는 세계 무기 수입 1, 2위국이고, 무기현대화를 위해 국방예산을 지속 증대하는 한편[11] 한국은 세계 11위의 무기 공급국임.

- 특히 한국이 경쟁 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조선산업과 전투훈련기(fighter aircraft trainer) 협력이 유망

※ 현대중공업이 미국 록히드 마틴사와 공동 개발한 KDX-III Aegis destroyer 등

- 인도 국방부 장관 A. K. Antony는 2010년 국방부간 MOU 체결 시 단순 무기 거래관계가 아니라 기술이전, 공동생산, 공동R&D를 희망한다고 밝힘.

②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파트너

○ 북한 비핵화는 인도의 안보이익에도 부합하며, 동북아 평화에 대한 인도의 입장은 한국 정부와 매우 유사함.

- 판문점 선언 환영,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 지지, UN 체제/감독하에서의 비핵화, 평화 통일, 국제사회 참여

※ 북한-중국-파키스탄-이란간의 핵관련 교류네트워크는 인도에게는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되기 때문임.

○ 하지만 인도의 입장 중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보다 오히려 미국에 근접하는 바 양측의 정책 공조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11) 인도는 2016년 전 세계 1위, 2017년 2위 무기수입국임.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검색일: 2018.11.20.)

- 인도는 판문점선언, 평양선언에서 남북간 인적교류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비핵화 측면에서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는 평가

※ 비핵화는 핵탄두 제거를 넘어서, 무기로 사용가능한 핵분열물질과 그 생산시설 미보유이며, 핵시설의 평화적 이용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

- 인도에서 북한이 핵, 미사일 실험 중단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보상하는데 대해 반대하는 주장도 있음에 유의

※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9호에서는 북한의 핵이나 탄도미사일 추가 실험은 추가적인 석유수입 제한을 가한다는 문구가 있음.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했다고 보상하는 건 마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보상하는 것과 같음.

- 또한 제재에 포함된 상품코드(HS코드)와 개성공단 생산품을 고려할 때,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안보리 제재 위반일 확률이 높은 사안으로, 안보리 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존재

○ 인도-북한 관계를 활용하는 전략적 선택도 고려할 필요

- 인도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영향력이나 외교적 시급성이 없음에도, 북한-파키스탄간 핵관련 협력으로 인해 북한과 전략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관계를 유지

※ 미국의 압력에도 인도는 북한과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유지, 평양에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 정권에서 외교부 차관도 방북하여 관계 유지에 힘쓴 바 있음.

- 나아가 남북간 화해가 정착될 경우, 인도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며 북한의 발전을 돕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입장

(3) 상생번영(Prosperity): 제조업 고도화와 통상 파트너십 강화

① 【산업고도화】 (인도) Make in India + (한국) 제조경쟁력 강화 및 GVC 개선

- (인도) 제조업육성 프로젝트 'Make in India'를 최대 성과사업으로 추진하여 '산업구조 고도화' 달성에 박차

※ Make in India 25개 중점육성분야 중 우리나라에 전자·반도체(ESDM: Electronics System Design & Manufacturing), 자동차 및 부품, 조선, 섬유, 식품가공, 방산 협력 요청

- (한국) 조립생산 비용 절감(저비용) 및 고부가가치 분야로 확대(고수익)로 GVC 업그레이드를 실현, 제조업경쟁력 약화에 선제적으로 대비

※ 한국 제조경쟁력은 16년 5위→20년 6위로, 제조업체화 서비스 강화 등

⇨ (우선협력분야) 전자·반도체(ESDM), 식품가공, 조선, 자동차, 섬유

② **【통상 파트너십】 (인도) Make in India, Foreign Trade Policy + (한국) 시장다변화 및 수출기업 애로 해소**

- (인도) 무역적자 해소를 양국 경협의 선결과제로 지속 주장하는 한편 투자 확대를 강조("투자는 국적불문 환영")

※ '17년 한·인도 무역규모는 200억 달러이고, 한국의 흑자는 100억 달러까지 확대

- (한국) 대인도 관세, 비관세 장벽 해소 및 호의적인 진출 여건 마련

※ 인도는 한국 주력 수출품목인 석유화학, 철강 등을 중심으로 반덤핑 제소 1위 국가

⇨ (우선협력분야) 상호호혜적 CEPA 업그레이드, CEPA 플러스 협력, 대인도 투자확대 지원 인프라 확충, 조세 및 금융협력 확대

- 인도 무역적자폭 심화 해소 및 공동번영 달성을 위한 선제적 실천사업으로 한국은 인도 수입상품전을 열어주는 것과 같은 전환적 접근이 필요

※ 파키스탄의 무역적자 완화를 위해 중국 정부는 매년 수입상품전을 개최

(4) 미래(Future):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체제 전환에 공동 대응

① **【4차 산업혁명】 (인도) Digital India, Make in India + (한국) 4차 산업혁명 대응**

- (인도) 인도의 고급 IT 기술력과 한국의 대량 생산력 결합 희망

※ 한·인도 재무장관 회의('17.06), G20 정상회담('17.07), 산업부 장관면담('18.02) 등에서 인도 대표단이 수 차례 언급

※ 인도는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e-거버넌스 확대 등을 통해 IT 및 IT응용산업을 토대로 인도사회의 디지털화(Digital India)와 이를 위한 창업(Start up India) 및 기술인력을 육성(Skill India)하는 프로젝트를 핵심 정책으로 발표

- (한국) 기업인 설문조사에서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 중 소프트웨어 역량 및 스타트업 생태계 취약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

※ KOTRA에서 실시한 기업인 설문('18.4월)에서 ICT, 스타트업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 대응이 인도와의 우선협력 분야인 것으로 조사됨.

⇨ (협력아젠다) 4차 산업혁명 신산업 공동육성, 스타트업, 신재생에너지

② **【에너지 협력】 (인도) New India by 2022, Clean India + (한국) 에너지 전환 정책**

- 한국과 인도 모두 중동 석유와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대표적인 나라로,

※ 인도는 3위 에너지 소비국, 한국은 6위 에너지 소비국이며 양국 모두 중동이 가장 큰 에너지 공급처임. 80% 이상의 원유를 수입하는 인도에 있어 에너지 산업 재편은 정책 우선순위가 매우 높음.

- 적정가격으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은 양국 공통의 관심사임.

※ 현재 한국과 인도는 미국의 이란제재 한시적 예외국에 포함되었으나, 6개월 이후에

대응책을 고민해야 함. 사우디는 일 500,000배럴 감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6일 OPEC은 러시아와 만나서 석유감산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됨.

- 인도와 한국이 공급자가 독자적으로 유가를 조정하지 못하도록 가격조정 관련 영향력을 높이는 협력도 가능함.

※ 이미 인도는 중국과 유가 관련 협의를 진행 중임. 인도는 이미 중국이 2010년 희토류 관련해서 일본에 보인 행태를 지켜본 바 있으며, 원자재 구매를 독점하고 있는 중국의 행보에 우려를 표명

- 나아가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양국은 모두 도전적 목표를 설정한 상황으로 한국은 현재 6.2%인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할 계획이고,

※ 한국은 석탄과 원자력을 이용한 전력생산비율을 줄이겠다는 계획임. 이 목표를 위해서 2030년까지 약 50GW를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생산해야 함.

- 인도는 2022년까지 100GW를 태양광으로, 75GW를 풍력으로 전력을 생산할 계획임에 따라,

- 한국과 인도 양국이 공통적으로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목표로 두고 있으면서 유사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비자, 공급자, 정부정책 등 다방면의 협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12)]

※ 소비자는 전력소비행태 변화에 적응,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환경성과 안전성 이해 제고, 생산자 역할까지 하는 프로슈머로 활동하는 방안

※ 공급자 측면에서는 기술 개발을 통한 생산단가 경감, 사물인터넷 등을 시스템에 도입 및 이를 우한 국제협력 확대. 정부 정책 측면에서 연구개발 및 인프라 투자 확대, 재생에너지에 대한 각종 규제 정비, 관계 분야 전문가 육성 등 다양한 협력이 가능

12) 문영석. 2018.

참고문헌

<국문자료>

더불어민주당. 2017.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235쪽.

문영석. 2018. "Korea's New Energy Policy and the Korea-India Cooperation." 『한-인도 전략대화』 발표자료.

최윤정. 2018. "상생하는 신남방정책 이행 방안." 『한국국제지역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국제지역학회 발표자료.

<영문자료>

Brester, David. 2010. "India's Developing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A Useful Friend in East Asia." *Asian Survey*, vol. 50, no. 2.

Campbell, Kurt. 2011.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Testimony before the U.S.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March 1, www.state.gov.

Choi, Yoon Jung. 2018. "New Southern Trade Policy and Korea-South Asia Economic Cooperation". The 9th Republic of Korea-SAARC Partnership Seminar Proceeding.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and US Council on Competitiveness. 2016. *2016 Global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Index*.

IMF. 2018.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Keating, Joshua E. 2011. "Stories You Missed in 2011." Foreign Policy (December).

Panda, Rajaram. 2011. "India-Republic of Korea Military Diplomacy: Past and Future Projections." *Journal of Defense Studies,* vol. 5, no. 1, pp.16-38.

The World Bank. 2018. *Doing Business 2019.*

United Nations. 2018. *UN Population Report.*

<온라인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

청와대 홈페이지. http://www.president.go.kr.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http://keri.koreaexim.go.kr

OECD DAC. http://www.oecd.org/dac/stats. (검색일: 2018년 11월 16일)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ute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https://www.sipri.org. (검색일: 2018년 11월 20일)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Government of India. https://www.mea.gov.in.

끝